

사회 인식 차가워진 노점

“걸리면 빨간줄” 잘 나가던 ‘고딩 붕어빵’ 한달 만에 사라져

〈전과 기록〉

황건강 기자

“한 번 더 걸리면 빨간줄(전과 기록)이 남는대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전통시장.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시장 한 쪽에 있던 붕어빵 노점이 사라졌다. 노점 이름은 ‘고딩 붕어빵’. 고등학교 3학년 동갑내기 친구인 김민재(18)군과 정승현(18)군이 사라진 노점의 주인이다. 아들 같은 고3 학생들이 노점을 시작하자 입소문을 탔다. 평일 5시간 영업에 300마리 가량 팔릴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소셜미디어(SNS)로 배달 주문도 들어왔다. 바쁠 땐 또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

그러나 이들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이달 초 시청에서 노점 단속을 나왔다. 지난 달 9일 영업을 개시한 뒤, 꼭 한 달만의 일이다. 일찌감치 자영업으로 승부를 보기로 결정하고 수능 대신 선택한 붕어빵 사업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내년 3월 군 입대 예정인 김군은 “장사는 잘되긴 했지만, 노점은 다시 하진 않을 계획”이라며 “군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만들어 다음엔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게를 내기 위해 목돈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군은 “2년 안에 1500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이 실종됐다. 붕어빵 노점 찾기 어렵다 보니, 매년 겨울이면 지역별 ‘붕세권(붕어빵을 파는 지역)’ 지도가 SNS에 공유된다. 붕어빵 노점을 위치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인기 순위를 오르내린다. 밀가루와 팥 등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에 섣불리 장사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한몫했지만, 노점 상인들은 그게 전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대다수 지역에서 신규 노점 허가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대다수 지역에선 노점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는 2018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일정 재산 규모를 넘지 않으면서,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는 등의 조건이다.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노점을 팔거나 빌려줘선 안 된다. 그러나 지침인 까닭에 지역별로 적용 방식은 지역 상황에 맞게 운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이다.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딩붕어빵’처럼 이 사실을 모르고 노점을 열었다간 언제든 단속을 통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노점이 불법은 아니지만, 단속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하는 식이다. 공유 도로에 자리 잡은 대다수 노점은 불법 도로점용 처벌 규정(도로법·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주요 상권의 경우 신규 허가를 받을 위치엔 이미 주인이 있고, 이마저도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점점 줄어가는 추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점상인 규모는 매년 줄어 코로나19 확산 전 34000명에서 2021년 3만2000명으로 줄었다.

노점 단속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정부가 거리 미관을 신경을 쓰면서 본격화했다. 당시만 해도 노점 상인을 두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회 구성원이란 인식이 강했다.

반면 최근엔 탈세나 소득 축소, 바가지요금 등 불법 행위나 통행권 침해 등 부정적 시각이 부각된다. 경기 부진에 점포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상인

들이 노점과 경쟁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김선경(42)씨는 “임대료 등 고정비 규모가 달라 같은 가격으로 노점상과 경쟁이 어렵다”며 “아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못 보던 노점이 생기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비정기적으로 노점을 여는 경우도 다반사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강모(48)씨는 한 주에 세 번 정도만 장사에 나선다. 노점을 찾아온 손님에게만 다음 영업 일자를 알려주는 식이다. 강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사업을 접으면서 지금은 노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노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최대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장사하러 나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점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세나 바가지, 위생, 보행권 침해 등 역기능도 있지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다수의 소비자가 찾는 음식점이 모여 있으면 맛집 거리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노점도 전통 시장이나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국인도 많이 찾는 후쿠오카를 비롯해 지역별로 산재한 노점 거리가 관광명소인 일본이 대표적이다.

한국과 정서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노점 규제는 지방이 있는 노점(야타이)과 손수레 노점으로 구분된다. 주로 음식을 파는 야타이는 오후 6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을 가능하고, 노점의 가로세로 규격은 각각 3m, 2.5m가량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조건이 붙는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구청 식품위생감시원이 매달 한두 차례 현장 검사를 나온다. 반면 손수레 노점은 상가와 노점상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노점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선 벼룩시장 형태로 노점이 열린다. 지자체가 허용한 구역에 도로사용료를 내면 노점을 허용하는 식이다. 허용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나 노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실증 연구를 진행해본 결과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먹거리 노점으로 야시장을 운영해 시장을 활성화한 경향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고 세부적으로는 상인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무허가 영업 땐 불법 도로점용 처벌 상인 “노점 생기면 손해 보는 느낌”

일 후쿠오카 등 노점거리 관광명소 유럽선 벼룩시장 형태 누구나 허용

보행권 침해·위생 등 역기능 있지만 ‘붕세권’ 등 상권 활성화 고려해야



붕어빵이 실종됐다. 사진은 경기 구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정승현(왼쪽), 김민재군.

/사진=황건강 기자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